

여론도 계파도 흔들… 신천지 의혹에 깊어지는 민주당 내홍

김민석 대표 긍정 평가 25.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보다 낮아
신천지 의혹 조사 공개 범위 쟁점
친청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압박

김민석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여론조사 등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가운데,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계파전까지 벌어지며 내홍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김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은 25.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67.6%다. 같은 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긍정평가 33.6%, 부정평가 59.5%를 기록해 김 대표보다 긍정 평가가 8.0%포인트 높았다.

정치권이 우려스럽게 분석하는 것은 민주당의 ‘뒤통수’로 불리는 호남 지역의 응답이다. 이번 조사에서 김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에서도 53.3%로 긍정 평가 39.1%보다 14.2%포인트 높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다.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꺾은 바 있는데, 취임 두 달 후 조사에서 호남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리얼미터는 “김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5.6%에 그친 것은 당내 계파 갈등에 더해, 최근 추미에 경기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당 이미지와 지도부 리더십에 부담을 준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내 계파 대립의 주요 원인인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먼저 제기했지만,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아 갈등 양상이 그대로 표면에 드러나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반명(反이재

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연합을 끊어 내야 한다”며 친청(친정청래)계와 이를 연결시킨 바 있는데, 지도부 내 입성한 친청계 최고위원은 연일 공개 최고위에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한 내용을 사실대로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신천지 신도의 민주당 당원 집단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가입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관련 증언도 당 내 기구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근거 있는 주장임을 확인했다.

친청계 이성운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이 8개월 동안 수사하고서도 국민의힘 외에 다른 정당에 대한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신천지 의혹 조사를 주도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 단장인 친명(친이재명)계 박

선원 최고위원은 “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 공개 발표하겠다. TF 단장으로서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대표 등이 박 최고위원을 만류하며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신천지 관련 후속 조치를 국정감사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조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조치하면 된다”며 “짜우지 말라. 있는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당내 내홍은 조사 결과 공개 절차를 거치며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포함한 후속 조치까지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의원총회 등에서 당 내부 공개에 그칠지 혹은 대중 공개 절차를 거친 후 수사의 의의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막바지 국감도 정쟁 얼룩… 민생·정책 실종

증인 채택 갈등·상임위 파행 반복
종합감사·겸임 운영위 국감만 남아

올해 국정감사가 이번주 26~27일 주요 상임위 종합감사와 28~30일 겸임 상임위원회 감사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여야가 피감기관에 대한 충실한 감사보다 자극적인 이슈 물리로 국감 파행을 일삼았던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이번주 초인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연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 감사는 28~30일에 차례로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조 대법원장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에선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노동 특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첨단기업 고소득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면제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을 발의했고 기노위 소속 최기상 의원은 노동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노사정의 초광역특구법 안에 노동 특례 도입 여부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두 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 안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29일엔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여당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끝내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실장에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을 따져 묻고 김현지 실장에게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경기·성남 라인 공공기관 알박기’ 의혹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운영위는 지난 21일 이 두 사람을 뺀 일반증인만을 범여권 주도로 채택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부수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운영위 국감장에 선다.

한편, 이번 국감은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는 의원들의 질의가 돋보이기보다, 잦은 파행을 일삼고 자극적인 ‘쇼츠’ 영상 생산에 골몰하는 의원들의 행태가 반복돼 눈살을 찌푸렸다. 여당의 각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쟁점 사안을 질의하기 위해 야당 의원이 요구하는 일반 증인은 거의 채택되지 않으며 제대로 된 민생·정책 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태홍 기자

오세훈, 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가도 탄력

항소심 무죄…국힘 내 세력 결집 주목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리스크’ 고비를 넘기면서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로 존재감을 키우는 오 시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

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린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상고를 할 방침이지만, 2심이 무죄가 나온 만큼 대법원 재판을 앞두더라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열세 속에서도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며 대권 주자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기에 이번 무죄 판결까지 더해지며 강경 노선과 대립각을 세웠던 비당권파 인사들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또 당권파나 친한(친한동훈)계 양쪽 모두 포함되지 않았던 중간지대 인사들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오 시장에게 합류하면 향후 보수 통합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움직임이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나 총선을 앞둔 당내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예진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군 박근혜·양부남 압축

모두 검찰 출신 친명계 호남 초선 의원

두 달째 공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양부남 의원 등 2명의 검찰 출신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물색해왔다. 공소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빠르게 인선에 조직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안팎의 소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박근혜·양부남 의원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인선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 8·30 개각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린 바 있다.

후보군으로 압축된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박 의원과 양 의원 모두 이 대통령령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당에서 법률특보나 법률위원장 등을 맡았다.

수사·기소 분리로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막 출범한 시기임을 고려해, 검찰 내에서 요직을 거친 베테랑 검사 출신인 이들이 적임자라고 본 셈이다. 새 법무부 장관은 달라진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고, 과도기적 상황을 맞은 조직을 이끌어나가며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 능력도 필요하다.

박근혜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검찰국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무나 검찰 인사·조직·예산 등 행정 전반을 다뤘고, 노무현 정부 팬 사법·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2024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당선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에 법률특보를 지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양부남 의원(왼쪽부터) 등 2명의 검찰 출신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뉴시스

양부남 의원(사법연수원 22기)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관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에선 대구 지하철방화사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일선 검찰청과 고검을 지휘하며 수사와 사건 처리, 조직을 관리한 경험이 있다는 평가다. 2024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에 당선됐고, 당에선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이처럼 최종 후보군이 2명으로 압축됐다는 소식이 들리며 이 대통령이 조만간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 공식 상황은 현 정부 초대 장관이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임한 지난 8월 26일 이후 60일,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이후로는 23일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김승원 전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큰 파장이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여론을 살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조직기소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공소취소 부분은 빼 달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에선 여전히 공소취소를 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근혜·양부남 의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 인선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syj@